

요시노 사쿠조와 3.1운동

한상일

1. 들어가며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 1878~1933)는 다이쇼(大正, 1912~1926) 시대를 대표하는 정치학자이자 사상가이며, 동시에 논객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과도 맞물려있는 이 시기의 일본은 안으로는 민주주의와 정당정치가, 밖으로는 국제평화와 국제협력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던 때이다. 요시노는 천황제의 절대성을 담보하고 있는 메이지(明治)헌법의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그 틀 안에서 ‘민본주의’라는 이론을 제시하여 법리상 주권은 천황에게 있다는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번벌(藩閥)에 의한 과두지배체제를 타파하고 정당정치와 보통선거를 바탕으로 한 의회민주주의가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서 그

한상일(韓相一) 1965년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1974년 클레어몬트대학에서 일본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는 명예교수로 있으며, 스탠퍼드대학, 도시샤대학, 프린스턴대학에서 객원교수로 연구했다. 주요 저서로는 『일본 제국주의의 한 연구』, 『일본의 국가주의』, 『일본 전후 정치의 변동』, 『제국의 시선』, 『일본, 만화로 제국을 그리다』(공저), 『지식인의 오만과 편견』, 『이토 히로부미와 대한제국』, 『쇼와유신』(昭和維新) 등이 있다.

는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 보통선거제도의 실현, 정당내각제의 발전 등 국내정치 개혁을 촉진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여 소위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대의 문을 열었다.

고등학교(第二高) 시절 기독교로 개종한 요시노는 스스로가 “나의 삶은 기독교 신앙에 의해서 형성됐다”고 할 정도로 평생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살았다.¹ 도쿄제국대학 법과에 입학하여 정치학을 공부하면서, 그는 학문적으로는 오노쓰카 기헤이지(小野塚喜平次)로부터 ‘중민’(衆民)주의와 ‘독일 국가학’의 가르침을 받았고, 종교적으로는 혼고(本郷)교회를 이끈 에비나 단조(海老名彈正)의 ‘국수적’ 기독교관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특히 요시노도 편집에 깊이 관여했던 혼고교회의 기관지 『신진』(新人)은 당시 일본이 직면한 국내외의 정치, 사회, 종교문제를 내셔널리즘이라는 시각에서 다루면서 학생과 지식인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대학 졸업 후 그는 당시 중국의 실권자였던 위안스카이(袁世凱)의 장남을 위한 가정교사로 초청받아 3년(1906~1909) 동안 중국에 체류했고, 이어서 유럽과 미국 유학(1910~1913)을 거쳐 1914년부터 도쿄제국대학에서 정치사 강좌를 담당했다. 그러면서 민본주의를 옹호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신진카이(新人會), 레이메이카이(黎明會) 등과 같은 단체를 조직하여 학생과 지식인 사회의 여론형성에 중심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그는 1917년 도쿄제국대학 기독교청년회(東京大YMCA) 이사장직을 맡으면서 조선인 유학생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었다.

요시노가 학술과 언론 활동을 통해서 일본의 국내외 정치와 정책에 관하여 활발하게 발언했던 1916~1921년 사이 그의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는 식민 통치하의 조선과 중국에서 일어나는 ‘반일’문제였다. 특히 조선 문제에 대한 그의 관심은 지대했다. 1916년 조선총독부의 통치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나서 시작된 요시노의 식민정책 비판론은 3.1운동을 맞이하면서 절정을 이루었고, 그 후 조선 문제는 그의 최대 관심사였다. 이 시기 그가 조

1 川原次吉郎 編輯兼發行, 『古川余影』(非賣品), 1933, 36쪽.

선 문제에 관하여 동시대 일본 지식인 누구보다 당국의 식민정책을 강하게 비판했고 나츠의 대안을 제시한 인물이라는 데에는 이론이 없다. 3.1운동이 전개된 1919년 3월부터 9월 사이에 식민정책에 관하여 20여 편의 길고 짧은 시론을 발표한 것만 보아도 조선문제에 대한 그의 관심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²

1916년 이후 요시노가 정부의 조선 식민지배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일본의 제국주의와 조선지배에 대한 비판이나, 아니면 다만 식민정책에 대한 비판이나에서 그의 ‘진의’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요시노는 1916년 이후 조선문제에 대하여 누구보다 강도 높은 비판적 시론과 논문을 많이 발표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상호모순과 표현의 애매함이 중첩되어 있어 무엇이 그의 참뜻인지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요시노는 국제적 제국주의를 반대하면서도 일본이 제국주의적 방식으로 확보한 ‘식민지’ 조선의 보존을 주장했고, 총독부의 식민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조선지배라는 식민지 경영의 본질에 찬동했고, 식민정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동화정책의 폐기를 주장하면서도 조선통치의 최종목표가 조선과 일본의 완전한 융합이라는 동화에 있음을 인정했으며, 조선의 독립을 지원하는 듯하면서도 일본의 안위를 위해서 조선에 대한 조치는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펴는 등 모순된 논리가 그의 언설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 글은 요시노가 3.1운동을 통해서 보여준 조선 문제에 관한 그의 진의를 구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요시노의 조선관을 이루는 원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학 시절의 조선문제에 관한 그의 생각을 추적하고, 1916년 식민통치하의 조선을 돌아보고 품게 된 식민정책의 문제점과 의문점을 살펴보고, 이어서 3.1운동 이후의 조선관과 조선독립의 문제를 찾아보기로 한다.³

2 요시노의 집필 논문에 관하여서는, 『吉野作造選集 別巻: 書簡・年譜・著作年表ほか』, 岩波書店, 1997 참고. 전 16권의 『吉野作造選集』은 1995~1997년 사이에 완간됐다. 이 글에서는 『選集』으로 표기한다.

3 이 글은 필자가 이미 발표한 「요시노 사쿠조와 식민자치관의 원형」(『일본 지식인과 한국: 한국관의 원

2. 요시노 사쿠조와 조선문제

메이지 시대를 살아온 모든 지식인이 그렇듯이, 요시노 사쿠조도 일찍부터 조선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1916년 조선총독부의 조선통치에 관한 긴 논문을 발표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조선관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요시노의 전기작가 다나카 소고로(田中惣五郎)가 ‘요시노 사상의 원형’이라는 『신진』에 러일전쟁을 전후하여 요시노가 발표한 전쟁 찬성론을 통해서 그가 지니고 있었던 조선관의 한 단면을 유추해볼 수 있다.⁴

우치무라 간조(内村鑑三)나 기노시타 나오에(木下尚江) 같은 기독교인, 또는 고토쿠 슈스이(幸徳秋水)나 사카이 도시히코(堺利彦)와 같은 사회주의자들이 1904년의 러일전쟁을 강력히 반대할 때, 요시노 사쿠조는 자신의 정신적·종교적 스승인 에비나 단조와 함께 ‘주전론’을 맹렬히 펼쳤다. 에비나가 러일전쟁을 “신국(神國)건설을 위한 자위적 의전(義戰)”이라고 강조할 때, 요시노는 “문명국 일본의 전제국 러시아에 대한 응징의 전쟁”으로 평가했다. 요시노가 전개한 주전론의 바탕은 러시아의 팽창에 맞선 일본의 국권 확장과 아시아에서의 선진적(先進的) 지위 확보에 있었다. 특히 그는 일본의 ‘생명선’이나 다름없는 만주와 조선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확신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 러시아는 오랫동안 부동항과 해외시장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위해 동아시아로 영토 확장을 시도해왔고, 만주를 점령하고 이어서 한반도를 장악함으로써 그 목표를 완수하려고 하고 있다고 요시노는 판단했다. 그의 표현을 빌리면 만주는 “현재 상공

형과 변형, 도서출판 오름, 2000)과 『제국의 시선』(새물결, 2004)을 참고했음을 밝힌다.

- 4 田中惣五郎, 『吉野作造: 日本のデモクラシーの使徒』, 未來社, 1958, 4쪽. 혼교교회를 이끌었던 에비나 단조가 1900년 7월 월간지로 창간한 『신진』은 1926년 1월호까지 지속했다. 일본은 20세기를 맞으면서 서구 문명으로부터 “당당히 머리를 들고 정신적 광명을 찾을 때”가 왔다고 선언하면서 창간된 『신진』은 교회의 기관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나 선교보다 정치, 사회, 사상 등의 문제를 더 많이 다루었다. 『신진』은 요시노를 위시하여 오야마 도스케(小山東助), 스즈키 분치(鈴木文治), 아소 히사시(麻生久) 등 뒷날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운동을 이끌었던 도쿄제국대학 출신 지식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업의 커다란 시장일 뿐만 아니라, 장래에는 측량할 수 없이 유망한 시장”이라고, “러시아가 일단 만주를 경략(經略)한다면 다음으로 조선을 지배하려 들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확실”했다. 따라서 국가의 안전을 공고히 하고 상공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전쟁이 불가피했고, 신속한 개전(開戰)을 통해서 일본은 만주를 지배하고 조선에 세력을 부식하는 기선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었다.⁵

일본의 독립 보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그 세력을 대륙으로 확장해야만 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륙으로 연결된 한반도를 선점해야 한다는 초기 요시노의 조선관은 도쿠가와 막부 말기나 메이지 지식인들의 조선관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그의 초기 조선관은 그가 뒷날 일본의 조선식민정책을 비판하면서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러일전쟁 직후 요시노는 예비나 단조의 지원을 받아 혼고교회 안에서 조선문제연구회(朝鮮問題研究會)라는 연구단체 조직을 주도했다. 연구회 발족의 결정적 계기는 기독교인이며 언론계 출신 정치인 시마다 사부로(島田三郎)가 혼고교회에서 가진 강연이었다. 요시노에게 ‘깊은 감동’을 준 강연의 요지는 조선인은 일본의 동포이고, 일본은 악정과 폐습으로 고통 받는 조선인을 구제할 책임이 있다는 것, 그리고 러일전쟁에서 거둔 승리를 계기로 일본은 한반도로 세력을 적극적으로 확장하여 조선구제의 책임을 실천할 때라는 것이었다.⁶

조선문제연구회가 어떠한 활동을 했고, 요시노의 조선관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중학교 이래 요시노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이념적으로 뜻을 같이하면서 혼고교회의 교인으로 연구회 결성을 함께 주도한 오야마 도스케(小山東助)의 논문을 통해서 조선문제를 보는 연

5 요시노는 ‘翔天生’이라는 필명으로 러일전쟁을 전후하여 『신진』에 여러 편의 시론을 발표했다. 「征露の目的」, 「露國の滿洲占領の真相」, 「露國の敗北は世界平和の基也」, 「社會主義者の非戰論」, 「日露戦争と世界政治」, 「大に黃禍論の起れかし」, 「露國に於ける主民的勢力の近狀」, 「露國貴族の運命」 등 러일전쟁 당시 시론의 일부는 『選集』 제5권에 포함되어 있다.

6 島田三郎의 강연내용은 요시노가 정리하여 『신진』 1905년 3월호에 「朝鮮に對する日本人の職分」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했다.

구회의 입장을 알 수 있고, 그 선상에서 연구회의 ‘간사’ 역할을 맡았던 요시노의 조선관도 상상해볼 수 있다.

연구회 결성 직후 오야마는 두 차례에 걸쳐 「조선동화론」(朝鮮同化論)이라는 비교적 긴 논문을 『신진』에 발표했다. 논문의 기본 요지는 시마다 사부로와 같이 조선인은 무지하고 무능할 뿐만 아니라 독립심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일본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러나 오야마 논문의 특색은 조선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선을 일본에 ‘합동’(合同)시켜야 한다는 병합론을 전개하고 있고, 합동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동화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야마가 뜻하는 합동이라는 것은 “모든 가능한 기회와 수단을 이용하여 유형무형의 방면에서 일한 두 민족이 의식, 사상, 감정을 융합하고 혼화하여 종국에는 영원히 떨어질 수 없는 공존 관계를 만드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일본인의 조선 이민을 통한 자연적 동화와 정치체제 개혁, 풍습 교정, 문예 혁신, 언어와 종교의 혼합 등을 포함한 의식적 동화를 병행한다.”라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했다.⁷

조선문제연구회는 일본 정부가 조선 병탄을 강행하기에 앞서, 그리고 지배철학이라 할 수 있는 동화정책을 식민정책의 근본으로 삼기 전에 이미 병합은 물론 동화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이는 혼고교회와 도쿄제국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조선문제연구회가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정책을 선도하는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회 결성을 주도하고 간사역을 담당했던 요시노의 조선관도, 마쓰모토 산노스케(松本三之介)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조선 민족으로서의 자주성을 힘껏 억제하는 정부의 관치주의와 동화주의의 방향을 시인하는 입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⁸

7 小山東助, 「朝鮮同化論」, 『新人』 5, 6号, 1905, 5~6쪽.

8 松本三之介, 『吉野作造』, 東京大學出版會, 2008, 267쪽, 松尾尊兌 또한 “오야마의 ‘조선동화론’은 필시 연구회에서 발표된 논문”이고, 이는 “오야마와 요시노가 중학 이래 그림자처럼 붙어 다닌(形影相伴) 교우 관계에서 볼 때 요시노의 당시 對朝鮮策을 시사하는 재료”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松尾尊兌, 『民本主義と帝國主義』, みすず書房, 1998, 132~133쪽.

3. 요시노와 식민정책 비판

앞에서 지적했듯이 요시노 사쿠조가 대학 시절부터 조선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중국에서의 활동과 유럽과 미국 유학이라는 장기간의 외국 생활은 그가 물리적으로 조선 문제에서 일정 기간 떠나있게 했다. 그는 귀국 후 1914년부터 도쿄제국대학에서 정치사와 정치학을 강의했고, 도쿄대학 기독교학생연맹회를 통하여 조선인 유학생들과 교류하면서 본격적으로 조선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⁹

요시노는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이론적 틀이라 할 수 있는 민본주의론을 발표한 직후인 1916년 3월에서 4월에 걸쳐 약 3주 동안 “관명”(官命)으로 “학술상의 조사를 위”해 조선과 만주를 시찰했다.¹⁰ 이 시기는 안으로는 민중의 정치참여라는 번벌(藩閥)내각의 종식을 몰고 온 다이쇼정변(大正政變)에 이어 보통선거를 요구하는 민주주의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었고, 밖으로는 제1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민족주의운동이 일어나고 중국 대륙에서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21개조 요구에 항의하는 중국인의 저항과 일화(日貨)배척운동이 거세지고 있던 때였다.

요시노는 여행 결과를 정리하여 『주오코론』(中央公論) 6월호에 「만선을 시찰하고서」라는 제목으로 50페이지에 이르는 긴 논문을 발표했다.¹¹ 제목에는 ‘만주와 조선’이라고 표현했지만, 내용 대부분은 일본 지배하에 있는 조선의 분위기와 조선총독부가 진행해온 식민통치를 논하고 있다. 이 글은 요시노가 조선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 최초의 글일 뿐만 아니라, 일본이 한국 병합 후 실시해온 식민지배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한 최초의 논

9 요시노는 도쿄대학 교수로 있는 동안 일본에 유학중인 많은 조선인 학생들과 교류를 가졌다. 1913년 金雨英과 만난 이후 교류한 조선인의 명단과 시기에 관하여, 松尾尊兌, 「吉野作造と朝鮮・再考」, 『朝鮮史研究会議文集』, 35호(1997/10) 참고.

10 요시노는 3월 27일부터 4월 19일까지 만주와 조선을 여행하고, 조선에서는 寺內正毅 총독을 위시하여 총독부관리와 조선인을 만났다. 『選集』 別卷, 87쪽.

11 「滿鮮を視察して」, 『選集』 9, 3~49쪽. 이 글 외에 요시노는 다른 월간지 6월호에 여행과 관련된 다음의 4편의 시론과 감상문을 발표했다. 「滿鮮植民地經營の批判」(『新人』), 「滿鮮旅行の感想」(『基督教世界』), 「滿鮮の旅」(『新女界』), 「支那は今何を騒いでいるか」(『婦人公論』).

문이라는 점에서도 당시 일본 사회에 많은 주의를 불러왔다.

요시노의 여행기는 식민통치의 긍정적인 면을 평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총독부의 통치는 “토민(土民, 조선인)들에게 근세 문명의 혜택을 누릴 기회를 제공한” 결과를 가져왔다.¹² 그가 의미하는 ‘근세 문명의 혜택’이라는 것은 식산공업, 교통수단의 발전, 농촌의 개발과 부흥, 병원 신설 등과 같이 조선인이 과거에 누릴 수 없었던 여러 가지의 ‘생활 편의’를 뜻하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공공질서와 법질서 확립에 따른 ‘토인’의 권리와 공정한 재판이 ‘훌륭하게’ 보장받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었다. 요시노에 의하면 “정의의 관념이 확고한” 데라우치(寺內正毅) 총독의 통치는 “한편으로는 국가의 위력을 과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토민에게 물질상 정신상의 만족과 발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조선 민족의 동화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통치의 사업은 일사불란하게 추진되고” 있었다.

그러나 요시노가 여행을 통해서 확인한 좀 더 중요하고 ‘우려’할 현실은 조선 사회에 팽배한 ‘반일’(反日) 분위기였다. 법률적으로나 사회적, 또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었음에도 조선인의 반일 감정은 뿌리가 깊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넓게 퍼져있었다. 요시노는 이러한 현상의 근본 원인은 “옛 봉건시대의 관민(官民)을 방불케 하는” 총독부의 위압(威壓)정책과 일시동인(一視同仁)에 역행하는 차별정책 때문으로 평가했다. 특히 일본인들이 ‘지배자’ 입장에서 조선인을 대하는 우월의식과 조선인의 활동과 생활을 엄격히 통제하는 강압적 헌병통치, 대외전시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관료통치, 종교에 대한 부당한 간섭, 민족심리를 무시한 동화정책 등이 조선인의 반일정서를 강화하고 있었다. 요시노에 의하면 이러한 정책들은 “일본민족의 성공적 식민지경영이라는 대국(大局)에서 본다면, 현재는 물론이고 장래에도 일본의 발전에 화(禍)를 불러올 것”이 분명했다. 따라서 ‘식민적 경영의 성공’을 위

12 이 글에서 요시노는 조선인을 ‘土民’ 또는 ‘土人’으로 표기하고 있다. 토민, 토인은 “원주민, 현지인”이라는 의미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원시적 생활을 하는 토착인종, 또는 미개지역에서 원시적으로 생활하는 주민을 천시하는 어휘”(三省堂, 『大辭泉』)로 쓰이고 있다.

해서는 조선총독부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 당국의 세심한 주의와 식민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했다.

이 논문의 특징은 당시 식민통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동화정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식민정책을 시행해온 모든 나라가 이민족의 동화를 ‘최종의 이상’으로 삼아왔지만, 요시노는 두 가지 이유로 동화의 실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하나는 국제정세의 변화라는 ‘시대적’ 이유였다.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강렬히 대두하는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사상적 조류에서 ‘강제적’ 동화정책은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영국 통치하에 있던 인도와 이집트의 국민 사이에 독립적 풍조가 강하게 대두하고 있고, 미국이 필리핀의 독립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조선에서의 동화정책도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절박하게 드러났다. 3.1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발표한 짧은 시론에서 요시노는 조선에서 강화되는 민족주의 의식과 식민지배정책과의 대치 관계를 지적하면서, “조선문제가 가까운 장래 우리 국내정치와 가장 중대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번 전쟁으로 나타난 민족주의의 조류가 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은가? 지금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결코 안심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당국의 ‘강제적’ 동화정책을 비판했다.¹³

요시노가 동화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는 더 중요한 이유는 일본인의 협량(狹量)한 민족성과 식민지 경영능력의 결여라는 ‘특수성’이다. 그에 의하면 일본인은 이(異)민족과 접촉한 경험도 많지 않고, 타(他)민족을 열등시하여 반항심을 도발하는 협량한 민족이었다. 이처럼 협량한 일본인이 “단시일에 다른 민족을 동화시킨다는 것은 말은 할 수 있어도 행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동화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더욱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와 국민의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요시노에 의하면 ‘동화’는 “정부만

13 「朝鮮統治策」, 『中央公論』, 1918. 10.; 『選集』 9, 50~51쪽.

의 사업이 아니라 국민적 사업이고, 관민합동의 비상한 노력의 결과로 비로소 성취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만주와 조선 시찰을 통해서 요시노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와 국민 사이에 단합과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었다. 국민은 동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정부에 맡긴 채 오히려 동화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고 있었고, 정부도 동화를 정부만의 사업으로 생각하며 국민을 교육하지도 않고 동화에 역행하는 국민의 태도를 방관하고 있었다. 조선에서 펼쳐지는 동화정책에는 국민의 마음이 담겨있지 않았고, 일시동인을 강조하는 관리의 방침과 노력은 형식에 그치고 있었다. “국민적 사업인 동화의 참 의미를 깨우치지 못하는 동화정책의 앞길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다. 같은 시기 『신진』에 발표한 또 다른 여행기에서도, 그는 “만주와 조선을 돌아보니 유감스럽게도 우리 일본인의 식민지 경영능력이 유치하기 이를 데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다. 요시노의 관찰에 의하면 “거국일치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진력한다는 각오를 추호도 찾아볼 수 없는 일본인들은 가는 곳마다 식민경영에 실패하고 있었다.”¹⁴

요시노의 식민정책 비판은 즉각 조선총독부의 반응을 불러왔다. 요시노가 이 논문을 발표할 당시인 1916년은 군과 헌병 경찰의 물샐 틈 없는 통제와 각종 법령 등을 통한 테라우치 총독의 무단통치가 ‘외관상’ 커다란 저항 없이 정착해가는 듯했고, 따라서 동화정책에 대해서도 상당한 자신을 가졌던 시기라 할 수 있다.¹⁵ 식민정책의 담당자인 총독부로서는 요시노의 비판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총독부 중추원서기관장이며 총독부 대변인(總督官房外事課長)을 겸하고 있었던 고마쓰 미도리(小松綠)가 합병을 계기로, 조선은 “셋집 하인에서 일약 부잣집 양자로 승격”했고, “양자를 진정한 동포로 융화”시키는 동화정책은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동화정책을 바탕으로 한 일본의 식민통치는 “옛 조선의 혼돈과 암흑세계를 일변

14 「滿鮮殖民的經營の批判」, 『新入』, 17권 6호, 1916.

15 나가타 아키히미, 박환무 옮김, 『일본의 조선통치와 국제관계』, 일조각, 2008, 21~33쪽.

하여 질서를 회복시켰고, 종전과 같은 관리의 횡포와 가렴주구의 폐해를 없앴고, 강도와 화적의 재난을 막았다. 옛날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것을 꿈으로 생각하던 조선인들에게는 이보다 더한 행복은 없다.”라고 자신했다. 그는 “조선인의 동화를 불가능하게 하는 사정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자신하면서, 요시노의 동화정책 비판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서 그가 조선을 방문하는 동안 몇몇 조선 신사(紳士)를 만나서 얻어들은 이야기와 이에 대한 감상에 불과하다.”라고 혹평했다.¹⁶ 그러나 고마쓰의 ‘혹평’이 오류였고, 요시노의 ‘우려’가 옳았다는 것은 1919년 3.1운동으로 확인됐다.

식민통치를 비판하는 요시노의 문제 제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조선통치에 대한 그의 부정적 평가는 어디까지나 ‘식민정책’에 대한 비판이고 의문이었지 ‘식민지배’라는 조선 문제의 본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는 조선 사회의 뿌리 깊은 ‘배일(排日)감정’을 다만 차별대우나 무력통치에 대한 ‘불평’[不平の念]으로 인식했을 뿐, 그 밑바닥에 맥맥이 흐르고 있는 독립의 열망은 무시했다. 조선 시찰의 목적도 조선인이 품고 있는 배일의 강도와 실제의 세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원인을 규명하여 ‘식민정책에 참고’로 삼기 위함에 있었다. 그의 표현을 빌리면, “조선인의 의견을 듣고 그들에게 오해가 있으면 이를 풀고, 또한 그들의 비판 속에 진리가 있다면 이를 수용하여 우리 식민정책의 참고로 삼으려는 데 있다. … 가능한 한 그들의 불평을 들어 조선통치의 참고로 삼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다.”라는 것이다. 달리 설명한다면, 요시노의 조선통치 비판의 목표는 조선인의 협조 내지는 최소한의 저항 속에서 조선을 지배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는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대목은, 정제되지 않은 이론이지만, 당시 요시노는 조선문제의 해결책으로 ‘식민 자치제’를 구상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민족주의가 역사를 움직이는 중요한 동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당시의 국제정세를 누

16 小松綠, 「朝鮮統治の真相: 吉野博士の批評に答ふ」, 『中央公論』, 1916. 8.

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요시노는 조선인의 불만과 저항을 강압에 의존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더욱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그 방안으로 참정권 부여를 생각했다. 그의 표현을 인용하면, “정치상, 그 가운데서도 외교관계상 정치적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방법”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즉 일본제국 안에서 조선인에게 자치권을 부여함으로써 식민통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지만, 대외적으로 독립은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다. 요시노의 이러한 식민자치론은 3.1운동 후 더 명확해진다.

4. 요시노 사쿠조와 3.1운동

1) 3.1운동과 일본의 반응

1919년 3월 1일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고, 이를 “세계 만국에 알리어 인류 평등의 큰 도의를 분명히” 하고, “민족자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가질 것을 천명”하며 시작된 3.1운동은 국내외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안으로는 ‘조선이 독립국’임을 구체화하는 임시정부수립을 위한 활동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이어졌다. 블라디보스토크의 노령임시정부, 상하이에 대한민국임시정부, 서울에 한성임시정부, 그리고 그 밖에 평양의 신한민국임시정부, 지린에 고려공화국 등이 출발했다. 노령, 상하이, 한성 임시정부는 1919년 9월 11일 통합하여 상하이에 통합대한민국정부를 수립하고 『독립신문』을 발행하고 외교활동을 전개하는 등 독립국으로서의 활동을 벌였다.

밖으로는 아시아민족운동사의 기폭제가 되었다. 3.1독립운동으로부터 한 달 후인 4월 6일 인도의 간디는 이날을 진리파지(眞理把持)를 실천하는 ‘샤타그라하(satyagraha)의 날’로 선언하고 비폭력 불복종운동에 불을 붙였다. 그로부터 또 한 달 후인 5월 4일 중국에서는 베이징대학학생들을 중심으로 일본의 제국주의적 강요인 21개조 폐기를 외치면서 항일, 반제국주의 운동

을 전개했고, 이는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봉건주의에 반대하고 과학과 민주주의를 제창하는 문화운동의 성격을 띤 광범한 민중운동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5·4운동에 이념을 제공했던 베이징대학의 천두슈(陳獨秀)는 “조선독립운동은 위대, 성실, 비장하고, 명료하며 동시에 바름(正)을 구비하고 있다.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민의(民意)를 근본으로 한 참으로 세계혁명사에 신기원을 열었다”고 찬양했다.¹⁷ 네루는 교도소에서 딸에게 보낸 편지에 세계 곳곳에서 전개된 독립항쟁사 가운데 “중요한 것은 1919년의 봉기”라고 평가했다.

3.1운동이 이처럼 국내외에서 커다란 반응을 불러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제공한 일본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 식민정책의 집행자인 조선총독부의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총독은 소요사태는 “불령(不逞) 조선인이 외국선교사의 선동에 놀아난 맹목적 폭동”이고, “민족자결주의에 대한 오해와 무지에서 기인한 망동”이라고 평가했다. 수상 하라 다카시는 조선의 폭동은 “민족자결의 낭설”과 “그 외에 다른 이유로 촉발됐다”고 단정했다. 그가 말하는 ‘다른 이유’란 미국 선교사의 선동을 뜻했다.¹⁸ 심지어 1896년 이래 ‘순수한’ 복음(福音) 전도에 종사했고, 그의 유언대로 뼈를 한국 땅에 묻은 노리마쓰 마사야스(乘松雅休)도 “어제까지도 것처럼 순정적이던 조선인이 격변하여 폭발적으로 조선 전토에 넓게 확대된” 3.1운동은 “일부 과격분자의 선동”에 의한 조선인의 “불근신(不謹慎)의 경거망동”이었고, “불온소요(不穩騷擾)”였다고 규정했다.¹⁹

3.1운동에 대한 일본 전체의 반응은 ‘폭동’, ‘폭거’, ‘소요’였다. 그리고 이에 참여한 조선인을 ‘폭민’(暴民)으로 규정하고 군대를 동원한 무자비한 진압을 실행했다. 현장을 취재한 한 외국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일본 정부

17 陳獨秀, 「朝鮮獨立運動之感想」, 『每週評論』, 1919. 3. 22. 朴慶植, 『朝鮮三・一獨立運動』, 平凡社, 1976, 11쪽에서 재인용.

18 長谷川總督, 「騷擾先後策私見」, 姜德相解說, 『現代史資料(25): 朝鮮, 1』, みすず, 1967, 494~500쪽; 『現代史資料(26): 朝鮮, 2』, 603~604쪽.

19 『福音時報』, 1919. 10. 1. 韓哲曦・飯沼二郎, 『日本帝國主義下の朝鮮傳道』, 日本基督教出版局, 1985, 42~45쪽에서 재인용.

의 탄압은 “야수적 힘 그 자체였다. 편린(片鱗)의 애정도 볼 수 없다.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총살당했고, 아주 적은 반항에도 장기간 감옥에 갇혀있다. 이것은 실로 한 조각의 인정도 느낄 수 없는 야수의 지배이다.”²⁰

일본에서는 ‘3.1소요사건’ 또는 ‘만세사건’으로 알려진 3.1운동에 대한 일본 언론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부 당국의 언론통제가 있었지만, 언론의 기본 논조는 총독부나 정부 당국과 같이했다. 3.1운동은 유럽의 식민지경영이 이미 경험했던 것과 같은 하나의 ‘소요’로서 일본이 극복해야만 할 과제이자, 기독교와 학생, 그리고 그들을 배후에서 선동한 미국 선교사의 음모였고, 민족자결주의에 대한 무지에서 기인한 ‘폭동’으로 규정했다.²¹ 주권회복을 위한 조선인의 민족적 자각과 열망의 표현이라고는 전혀 평가하지 않았다.

다이쇼 시대를 풍미했던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등 자유·혁신계 지식인들 대부분은 침묵했다. 그런 가운데 요시노 사쿠조는 예외적으로 3.1운동의 심각성을 인식했다. 그에 의하면 3.1독립운동은 “다이쇼 역사의 커다란 오점”이고,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느냐는 “동양 선진국으로서 일본의 체면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가운명의 발전과 중대한 관계”에 있는 사건이었다.²² 1916년과 달리 요시노는 강도 높게 식민정책을 비판하면서 당국의 정책전환을 촉구했다.

2) 요시노와 3.1운동

요시노가 모든 국민이 조선 식민통치에 주의를 깊이 기울일 것을 제안한 지 반년도 안 돼서 그가 우려했던 ‘폭동’이 일어났다. 이후 요시노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조선식민지통치문제였다.

요시노는 『주오코론』 4월호에 2편의 글을 실었다. 하나는 3월 22일 개

20 North China Daily News, 1919. 3. 21., 『現代史資料(26): 朝鮮 2』, 612쪽.

21 언론 논조에 관하여, 『現代史資料(26): 朝鮮 2』, 662~672쪽; 松尾尊兌, 「吉野作造と朝鮮」, 『人文學報』 25, 京都大學, 1968, 125~149쪽; 申國柱, 「三一運動과 日本言論의 反應」, 『三一運動五十周年紀念論集』, 東亞日報社, 1969, 485~498쪽.

22 「朝鮮暴動先後策」, 『中央公論』, 1919. 4.; 『選集』 9, 52~54쪽.

최된 레이메이카이(黎明會)의 강연록이다. 요시노는 조선 ‘폭동’의 원인은 조선통치의 실패를 뜻하는 것으로서 일본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대불상사”(大不祥事)라고 지적하고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조선에서 ‘폭동’이 일어났음에도 당국자나 국민의 자기반성이 없고, 조선인이 일본의 지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려는 노력이 없고, 조선에서의 반일운동을 “제삼자의 선동”으로 타하는 지배계층의 반성을 촉구했다.²³ 〈시론〉란에 게재한 또 다른 짧은 글은 요시노가 제시한 수습책이다. 그는 3.1운동을 ‘폭동’, 그리고 이에 참여한 조선인을 ‘폭도’로 규정하고, 수습책으로서 “자비와 위엄을 병행한”(恩威並び) 다섯 가지의 방안을 자세한 설명 없이 제시했다. 첫째, 조선인의 집단행동이 폭동의 형태로 나타났으므로 엄벌에 처하여 국법의 위엄을 보인다. 둘째, 국법의 위엄과 동시에 황실이 거액의 하사금을 베풀어 조선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도록 조치한다. 셋째, 모든 분야에서 조선인 차별을 철폐하고 일시동인정책을 철저히 실행한다. 넷째, 조선인에게 어떤 종류의 자치(或種の自治)를 인정하는 방침을 명확히 밝힌다. 그리고 다섯째, 한일 민간인의 협동을 위하여 소통기관을 설립한다.²⁴

요시노는 4월 이후 『주오코론』을 위시한 월간종합잡지, 『도쿄아사히신문』을 비롯한 일간지, 『신진』을 포함한 각종 학술지 등에 매달 거르지 않고 조선문제와 식민정책에 관한 글을 실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레이메이카이나 YMCA를 중심으로 강연회를 주도하고 자신의 조선정책 비판을 발표했다. 레이메이카이는 6월 25일 3.1운동과 식민정책을 주제로 한 제6회 특별강연회를 개최했고, 요시노를 포함한 당시 대표적 자유주의자들이 이에 동참했다. 요시노의 강연 “조선통치의 개혁에 관한 최소한도의 요구”는 1916년 이후 그가 주장한 내용을 종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²⁵

첫 강연자로 등장한 요시노는 먼저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나는

23 강연 제목은 “先ず自己を反省せよ”였으나, 『中央公論』 4월호에는 “對外的良心の發揮”라는 제목으로 수록됐다. 『選集』 9, 55~66쪽.

24 「朝鮮暴動先後策」, 52~53쪽.

25 「朝鮮統治の改革に關する最小限度の要求」, 『黎明會講演集: 朝鮮問題号』, 1919. 8.; 『選集』 9, 64~104쪽.

무력진압과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요’가 진정되는 국면에서 적극적인 개혁정책 없이 조선문제를 ‘경시’(輕視)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우려했다. 다른 하나는 “야만성을 충분히 발휘”한 수원 제암리교회 방화살해사건을 지적하면서 당시 일본 당국이 보여준 강압적이고도 폭력적인 행위는 “일본국민의 양심을 위해서 묵과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런데도 정부, 언론, 정당, 모든 국민이 개혁안을 제시하지 않고 등한시했다.

요시노는 “조선인들도 만족할 수 있고, 일본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책”을 만들어 가야 함을 주장하면서, 이를 위한 ‘최소한도의 요구’로서 네 가지 ‘방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의 ‘요구’는 새로운 개혁안이라기보다는 이미 1916년 「만선을 시찰하고서」와 「조선폭동선후책」에서 제시한 정책개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식민통치를 성공하기 위해 요시노가 ‘요구’한 첫째 개혁은 조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일시동인을 표방하면서 일본이 실시한 10년 동안의 식민통치는 교육, 관리채용, 승진과 대우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하고 있었다. 특히 조선인은 능력개발과 발전의 바탕이라 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와 질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었고, 이는 조선인 불만의 주요 원인이었다. 요시노는 “진정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일시동인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하더라도 식민통치는 성공할 수 없다”고 보았다.

둘째 개혁안은 무인(武人)통치를 철폐하는 것이다. 그는 군인만이 조선을 통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만 하고, 이를 위해서 군인만을 총독으로 임명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문관을 총독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혁할 것을 요구했다. 요시노는 다른 짧은 논평에서도 “미묘한 민족심리를 통달할 수 있는 특수한 교양을 갖추지 못한 군인은 식민지 통치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지적하면서, 군인을 중심으로 한 조선총독부의 식민정책은 “시대에 뒤진 악정(惡政)”이고, 군인이 지배하는 총독부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가장 부적당한 자가 담당”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았다.²⁶

셋째는 그가 의문을 제기했던 통치방침으로서의 동화정책을 폐기하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긴 역사와 독자적 문화를 지닌 조선인에게 모든 전통을 잊고 일본인이 되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이 추진해온 동화정책은 비과학적이고 지극히 편협한 것으로서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다. 그에 의하면 일본과 조선이 장래에 근본적으로 융화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강제적이고 강압적인 동화정책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네 번째 개혁안은 일본이 누리는 언론자유를 조선에도 허락하는 것이다. 조선에서의 언론은 데라우치 통치 10년 동안 정교하게 고안된 언론탄압정책에 의하여 철저히 통제되고 있었다. 이러한 언론통제는 조선을 암흑과 같은 상태로 만들었고, 이로 말미암아 조선인의 불만을 샀다. 이뿐만 아니라 총독부가 여론을 살피려고 해도 살필 수 있는 통로를 차단시켰고, 결과적으로 식민통치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요시노의 표현을 빌리면 “언론자유를 극단적으로 억압하면서 통치의 성공을 기대하는 것은 마치 자본 없이 장사하려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²⁶ 조선인의 여론을 알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일본에서 판매되는 출판물이 조선에서도 판매될 수 있을 정도의 언론자유가 필요하다는 것이 요시노의 요구였다.

요시노는 이러한 4개의 정책개혁은 ‘폭동’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로서 속히 정부가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선 문제를 어떻게 수습하느냐는 일본국민이 “대륙발전의 능력이 있나 없냐의 시험문제”이고, “이 시험에서 낙제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식민통치의 성공을 희망했다.

26 「朝鮮統治の國民的支配」, 『中央公論』, 1919. 7.

27 「朝鮮に於ける言論自由」, 『中央公論』, 1919. 6.

5. 요시노와 조선독립문제

모두가 침묵하고 있을 때 요시노가 정부 당국의 무단적이고 관료적인 식민 정책의 부당성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식민정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동화정책에 의문을 제기한 것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볼 때 용기 있는 주장이고, 동시에 많은 조선인에게 고무적인 발언이었다. 3.1운동 후 그는 당국의 조선정책을 시대에 뒤떨어진 ‘악정’이라고까지 정면비판하고, 무단통치와 차별대우의 철폐, 강압적 동화정책의 포기, 폭넓은 언론의 자유 등 식민정책의 개혁을 촉구했다.

요시노는 특히 3.1운동 후 그의 글 여러 곳에서 조선 병합의 부당성과 조선의 독립을 지지하는 듯한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조선인은 “독자의 문명을 가진 하나의 민족”이고, “조선 민족은 조선 민족으로서 타고난 자질을 자각하고 그 본래의 재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여 민족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듯했다. 또한 “조국의 (국권) 회복을 기도하는 것은 일본인이나 조선인이나 중국인이나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시인되는 도덕적 입장”이라거나, 조선인의 독립운동은 “법률적으로는 배척해야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크게 이를 양해해야 할 이유”가 있고, 그러므로 “조선인들을 불령흉폭(不逞凶暴)이라는 도덕상의 오명을 씌우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1913년 이후 장덕수, 백남훈, 김성수, 김준연, 현상윤 등 많은 조선 유학생들과 교류하면서, 도쿄조선청년회관 폐쇄문제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조선인의 처지를 대변하고 투쟁했다.²⁸

1916년 이후, 특히 1919년 3.1운동 이후 요시노가 발표한 조선에 관한 모든 시론은 식민정책 비판으로 일관했다. 그런 연유로 그는 정부와 마찰을 빚기도 했고 ‘요주의’(要注意) 인물로 감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요시노가 독립선언문에 나타난 ‘조선의 독립국’임을 인정하고

28 1920년 초 일본 정부가 도쿄 간다에 자리 잡은 조선 YMCA를 “각종 음모의 策源地”로 규정하고 이를 폐쇄하려고 할 때, 요시노는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고 폐쇄 시도는 결국 무산됐다. 「朝鮮青年會問題-朝鮮統治の覺醒を促す」, 『新人』, 1920. 2.; 『選集』 9, 123~142쪽.

이를 위해 식민정책을 비판하고 포기할 것을 요구했냐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요시노는 ‘애매한’ 표현으로 조선의 민족적 독자성을 인정하는 듯했지만, 그는 결코 조선의 독립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가 전개한 모든 조선 문제에 관한 시론과 식민정책 비판의 대전제는 ‘성공적 식민지경영’에 있었다. 앞서서도 지적했지만, 최초의 종합적 조선 식민정책론이라 할 수 있는 1916년의 시론에서 그는 자신의 조선 시찰의 주된 목적은 조선인의 심층에 자리 잡고 있는 반일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여 식민통치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성공적’ 조선통치를 위해서는 “소수이지만 교육받은 총독부의 조선인 관리를 설득하고 그들의 충성심을 확보하여 그들을 통해 일반 조선인을 일본으로 끌어들이야 한다”는 조선인 회유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총독부 경무국의 마루야마 쓰루키치(丸山鶴吉)가 요시노의 조선통치 비판 논조를 비판했을 때도, 요시노는 결코 자신은 ‘조선 방기론자(放棄論者)’가 아님을 거듭 강조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비판은 성공적 식민정책, 요시노의 표현을 빌리면, “조선인의 마음을 얻는 통치”를 위함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했다.²⁹ 그는 식민정책을 비판하고 조선인의 저항을 대변하는 듯했지만, 그에게 3.1운동은 어디까지나 ‘폭동’이었고, 이에 참여한 조선인은 ‘폭도’였다.

요시노가 러일전쟁 당시 품고 있었던 조선관, 즉 일본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서는 조선을 지배해야 한다는 생각은 3.1운동 당시에도 변함없었다. 그는 동화주의를 근간으로 한 일본의 식민통치는 실패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그 위에서 반성과 개혁을 촉구하는 식민정책비판론을 폈다. 그러면서도 그는 명확하게 조선의 독립을 옹호하거나 주장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조선은 일본의 국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따라서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자신의 기본 입장을 명확히 했다. 요시노는 “조선인이 조선인의

29 「朝鮮統治策に關する丸山君に答ふ」, 『新人』, 1920. 4.; 『選集』 9, 143~151쪽.

손에 의하여 어떻게 다스려질 것인가는 일본의 이해휴척(利害休戚)과 크게 관계 있다. 우리는 종래의 통치방침과 같이 일본적으로 치우친 것은 유감스럽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조선인을 위한 조선’주의는 방임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³⁰ 3.1운동 직후 도쿄대학에서 개최된 전국기독교청년대회에서도 그는 조선의 독립을 공개적으로 부인했다. 정치문제 간담회 강사로 참석한 요시노는 “조선정책에 관한 청중의 질문”에 대하여, “무단정치가 식민지통치 실패의 근원”이고, 무단통치로 “일시 압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영구히 해결할 수는 없다”고 기존의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선인의) 독립운동에는 타당한 이유도 있고, 일본에도 책임이 있다. 그러나 조선의 독립은 과거 청일, 러일 두 전쟁을 초래한 것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본에 위협을 불러온다.”라고 조선의 독립을 명확히 부정했고,³¹ 또 다른 기회에 그는 “일본의 조선통치가 실패한 결과로 조선반도에 일본을 적대시하는 적극적인 세력이 성립한다면 이는 일본에 커다란 위협이고, 나 또한 이를 크게 염려한다.”라고 하여 일본의 안전이라는 틀 속에서 조선의 위치를 명확히 했다.³² 통치방법의 개혁은 바람직하지만, 독립은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식민통치 비판에 대한 요시노의 진의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정부가 조선통치 개혁정책을 발표했을 때 더욱 분명히 나타난다. 일본 정부는 1919년 8월 군인으로 한정했던 조선 총독 임명을 문무(文武)병용으로 바꾸고, 총독의 지위를 내각의 간섭을 받지 않는 천황 직속에서 총리의 지휘 감독 아래로 두었으며, 헌병제도를 폐지하는 등 관제개혁을 단행했다. 그리고 사이토 마코토(齋藤實)를 총독으로, 미즈노 렌타로(水野鍊太郎)를 정무총감으로 임명했다. 요시노는 이러한 정책변화를 “조선통치의 방침을 근본적으로 개혁한 일대개선(一大改善)”이라고 지지하고, 사이토와 미즈노 임명은 “통치의 개혁에 관하여 전도의 광명을 기대하기에 족한 인선”이라고 환영하고, “조선통치

30 『朝鮮暴動先後策』, 53쪽.

31 日本基督教青年會, 『開拓者』, 1919. 5, 90~91쪽.

32 『外交上に於ける日本の苦境』, 『婦人公論』, 1921. 1.; 『選集』 9, 156~164쪽.

개발에 신기원을 긋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했다.³³ 그리고 “국제정세에 밝은 미즈노 총감이 있으므로 머지않아 조선통치의 국면도 새로운 모습을 갖추 것”을 확신하면서, 지난 10년의 통치는 실패했지만 새로운 총독과 정부 총감 아래에서 반드시 성공하여 국제 사회에서 ‘문명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한반도 지배의 강한 의지를 밝혔다.³⁴

이처럼 정부 당국의 식민정책을 비판하면서도 조선의 독립을 인정하려 하지 않은 것은 요시노 사쿠조뿐만 아니라 당시 모든 지식인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정부의 식민정책을 “계모정치”(繼母政治)라고 비난했던 후쿠다 도쿠조(福田徳三)는 “조선인들이 외치는 소위 독립이라는 것은 참을 수 없어 나온 약자의 소리, 패자의 소리, 학대받는 자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통치가 개선되면 자연히 소멸할 것이라고 밝혔고, 우치가사키 사쿠사부로(内ヶ崎作三郎)는 “일한병합의 조치는 공명정대한 것인데 다만 이를 실현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조선의 독립을 부인했다.³⁵ “만일 총독정치를 배척하기 때문에 배일이라고 부른다면, 일본인도 모두 배일이고, 나 또한 배일의 급선봉이다.”라고 식민정책을 비판했던 나카노 세이고(中野正剛)도 조선의 독립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하고 있다. “일본인은 조선에서 손을 뗄 수 없다. 일본에게 조선은 영국에게 아일랜드보다 더 중요하다. 조선은 일본과 대륙을 이어주는 다리이고, 그 다리를 차단한다면, 일본과 대륙을 융합하는 경제생활은 성립할 수 없다. 그 위에 조선을 독립시키는 것은 외래의 야심국으로 하여금 동아의 옆구리(橫腹)에 무쇠주먹(鐵拳)을 질러 넣는 것과 같다.”³⁶ 요시노의 조선관의 바탕도 이와 크게 다를 바 없었다.

33 「新總督及び新政務總監を迎ふ」, 『中央公論』, 1919. 9.; 『選集』 9, 114~116쪽.

34 「朝鮮人の自治能力」, 『中央公論』, 1919. 9.; 『選集』 9, 118쪽.

35 『現代史資料(26): 朝鮮, 2』, 642~643쪽.

36 『滿鮮の鏡に映して』, 東方時論社, 1921, 126쪽.

6. 맺는 글: ‘식민 자치제’

요시노는 조선총독부의 식민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자기반성을 요구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조선의 독립을 지지한 것은 물론 아니었다. 그렇다면 요시노가 품고 있었던 조선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 그가 뚜렷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다만 그가 거듭 강조했던 바와 같이 무단통치 포기, 일시동인의 선정, 언론의 자유 등을 통한 조선인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추상적인 방안과 함께, 조선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식민 자치제’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시대정신이었다고 할 수 있는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흐름을 잘 알고 있었던 요시노는 조선에서의 무단적 식민통치는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있었다. 무력으로만 억압할 수 없는 조선인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일본제국이라는 틀 안에서 조선 내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정권을 준다는 방안이다.

대단히 단순하고 추상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요시노는 1916년 이후 두 차례 조선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식민 자치제를 제시했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1916년 만주와 조선을 시찰하고 나서 조선에 팽배한 반일 분위기를 순화시키는 방안으로, “정치상, 그 가운데서 외교 관계상 정치적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방법”의 참정권을 생각하고 있었다. 즉 조선인에게 자치권을 부여함으로써 식민통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지만, 대외적으로 독립은 인정할 수 없다는 영국연방의 자치령으로서 아일랜드 경우를 염두에 두었던 것 같다.

두 번째로는 3.1운동 직후 수습책의 하나로 “선인에게 어떤 종류의 자치(或種の自治)를 인정하는 방침을 내놓아야 한다.”라며 보다 강한 논조로 조선인의 참정권 문제를 제안했다. 그러나 그는 두 가지 단서를 달았다. 하나는 자치의 범위, 시기, 방법에 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연구 후 실현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치를 검토하면서 ‘조선인을 위한 조선’주의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조선을 “다만 조선인

의 입장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확신했다. 결국, 요시노가 생각하는 자치라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에 종속하는 자치를 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식민 자치제는 다만 요시노만의 구상이 아니었다. 식민지의 내정에 관해서 식민지 스스로가 처리하는 방침에 따라 자치권을 인정하고, 모국은 그에 대한 감독권을 총괄한다는 식민 자치제는 당시 학자나 관료들 사이에는 비교적 잘 알려진 정책대안이었다. 당시 식민정책연구의 제1인자로 알려진 교토제국대학의 경제학 교수 야마모토 미오노(山本美越乃)는 3.1운동 직후 “조선의 장래는 마치 영국의 캐나다, 호주, 남아(南阿) 등에 대한 관계와 같이 자치를 허락하여 소위 자치 식민지로서 양자의 관계를 원만하게 지속하는 데 있다. … (조선인에게) 입법에 참여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함께 또한 그들로 하여금 책임정부를 소유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선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했고, 요시노도 “야마모토 씨의 달견에 승복한다.”라고 강한 지지의 뜻을 밝혔다.³⁷

요시노 사쿠조는 ‘다이쇼 데모크라시’라는 민주주의와 정당 중심의 정치체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이론을 제기하고 뒷받침한 정치학자이면서 논객이었다. 기독교적 배경을 지닌 그는 억압받는 조선인에게 인도주의적 애정을 보였다. 또한 그는 무단적이고 관료적인 지배, 일시동인에 역행하는 차별, 철저한 언론통제 등 식민정책을 정면에서 비판하고 근본적 개혁을 촉구했다. 그러나 그가 비판한 것은 조선이 독립국임을 부정한 식민지배가 아니라, 조선인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지배의 기술이었다. 그에게 조선은 여전히 러일전쟁 당시와 같이 일본의 ‘이해휴적’에 절대적 관계가 있는, 그래서 지배해야만 할 일본의 한 부분이었다. 요시노도 ‘안으로는 민본주의, 밖으로는 제국주의’를 주장했던 다이쇼 시대의 자유주의자들처럼, 안으로는

37 山本美越乃, 「朝鮮統治の根本問題」, 『經濟論叢』, 1919. 9, 427~435쪽. 야마모토뿐만 아니라 식민정책학자인 교토제국대학의 스에히로 시게오(末廣重雄), 도쿄제국대학의 야나이하라 다다오(矢内原忠雄), 메이지 대학의 이즈미 아키라(泉哲), 식민통치관료 모치지 로쿠사부로(持地六三郎) 등 많은 학자와 관료들이 조선의 식민자치제를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3.1운동과 6.10만세를 계기로 일본에서 논의된 식민자치론에 관하여, 한상일, 『제국의 시선』, 207~238쪽 참고.

국민의 권익과 정치참여의 자유 확대를 주장했으나, 밖으로는 조선인의 저항을 순화하면서 더욱 철저한 식민통치를 구상한 민본주의자였다. 그런 의미에서 요시노 또한 ‘자유주의적 제국주의자’(liberal imperialist)의 한 사람이었다.³⁸

38 Jung-Sun N. Han, *An Imperial Path to Modernity: Yoshino Sakuzo and New Liberal Order in East Asia, 1905~1937*, Harvard University Press, 2012, p. 106.